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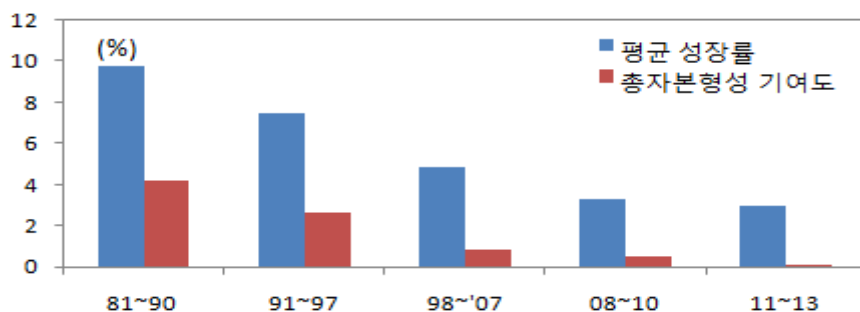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과제

최 상 목 (기획재정부 정책협력실장)

1. 들어가는말: 기로에 선 한국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우리 경제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 투자활성화, 부동산대책 등 전방위적 노력 등으로 우리 경제가 장기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되었지만, 회복 속도와 강도는 아직 기대에 미흡하다. 특히, 과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어 위기 이전에 비해 경제의 활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 이전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성장 기조로 다시 정체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 경제의 평균 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현재 G20 국가들의 1인당 GDP는 장기 추세와 비교할 때 여전히 8%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¹⁾ IMF는 이 중 5%p가 생산성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의 고용·투자 부진이 잠재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2018년까지 G20의 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²⁾

<그림 2> G20 종합적 성장전략 개요

세계경제 상황인식	• G20의 1인당 GDP가 장기추세 대비 8% 낮음(IMF)
목 표	• 2018년까지 G20의 GDP 규모를 현추세 대비 2% 이상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규제완화, 인프라투자, 금융중개기능 강화 등 • 고용: 여성, 청년 노동참여 제고 등 • 무역: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 등 • 경쟁: 기업간 경쟁촉진, 혁신 제고 등

자료: G20 communique – Meetings of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2014년 2월 23일.

세계 각국이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향후 3~4년은 세계 경제의 지형을 바꾸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조개혁에 선제적으로 나섰던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반면에, 그간 구조개혁에 미흡했던 일부 신흥국들은 ‘대감속(Great Deceleration)³⁾’에 직면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축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사상 유례가 없었던 선진국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고, 주된 부가가치 창출 요소가 노동·자본 → 지식·정보 → 상상력·창의력으로 이동하는 흐름과 맞물려 각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앞선 자와 뒤쳐진 자’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기초를 탄탄히 하고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들이 미래의 기회를 선점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혁신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세계 경제의 전환기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과제들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IMF, “Macroeconomic and Reform Priorities,” 2014년 2월 22일.
 2) G20 주요 회원국 성장전략의 주요내용은 별첨 참고.
 3) The Economist, 2013년 7월 27일.

2.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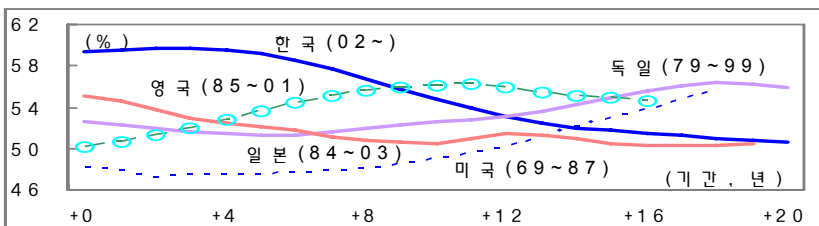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인구 둔화, 추격형(catch-up) 성장 전략의 한계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둘째,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칸막이식 규제 등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고 있다. 셋째, 수출-내수,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등 부문간 격차가 지속되어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1) 성장 동력의 약화

노동, 자본, 생산성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세가지 요소이다. 우리 경제는 인구 둔화, 투자행태의 보수화 등으로 노동과 자본 투입이 제약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 속도 둔화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행하는 기간이 26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154년), 미국(94년)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속도이다.⁴⁾ 특히, 주요국들을 현재 우리와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을 당시의 인구구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영국·독일·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1인당 GDP가 2만~3만달러 기간에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도 특히 생산성이 높은 핵심생산인구(25~49세) 비중이 상승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생산인구 비중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림 3> 핵심생산인구/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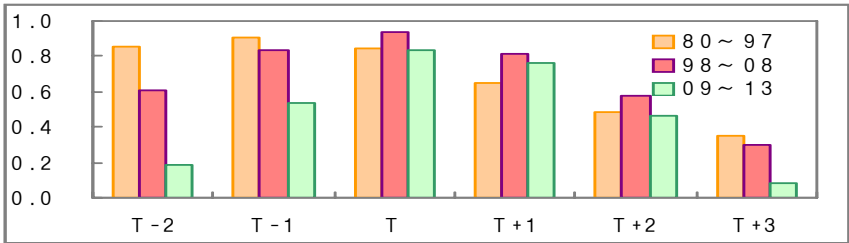


자료: OECD, 주: 1인당 실질 GDP(PPP 기준) 2~3만달러 기간.

4) 고령화사회: 만 65세 노인인구비율 7%, 초고령사회: 노인인구비율 20% 이상.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주체들의 투자 행태도 보수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국민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에는 투자가 경기에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슈페터가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강조한 창조적 파괴, 즉 혁신적 기업이 정신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4> 설비투자과 GDP간 시차상관계수



자료: 한국은행 ECOS 국민계정자료 가공.

노동·투자 등 양적 성장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로 생산성 향상도 지체될 경우 성장잠재력의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KDI·IMF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6% 중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 4%대로, 위기 이후에는 3%대로 둔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특히, 최근 IMF 보고서⁵⁾는 2010~2012년중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 수준에 그치면서 잠재성장률 또한 3% 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표 1> 주요기관 잠재성장률 추정 및 전망

KDI('12.11)	'81~'90	'91~'00		'01~'10		'11~'20		'21~'30
	8.6%	6.4%		4.5%		3.6%		2.7%
한국은행('13.5)	—	'90~'99		'00~'09		'10~'12		—
	—	6.7%		4.5%		3.3~3.8%		—
IMF('14.4)	—	'91~'96	'97~'01	'02~'07	'08~'09	'10~'12	'20년	'25년
	—	7.1%	4.6%	4.8%	3.6%	3.3%	2.4%	2.0%

2) 취약한 제도적·경제적 인프라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칸막이식 규제로 인한 이권 추구행위, 대립적인 노사관계 등 비정상적인

5) IMF, “How can Korea Boost Potential Output to Ensure Continued Income Convergence,” 2014년 4월.

제도와 관행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WEF의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25위에 올라 있지만 정부규제·공공부문 경쟁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적 요인’ 부문의 경쟁력은 74위에 머물렀다. 또한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78위에 그쳤으며, 상품시장 효율성 역시 규제에 따른 비효율 등을 반영하여 33위에 그쳤다.

공공부문, 제도, 노사관계 등은 경쟁과 경제활동의 규칙을 설정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시장 경제의 기본 인프라이다. 도로, 항만 등 물적 인프라가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적, 경제적 인프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표 2> WEF 국가경쟁력 부문별 순위(2013년)

구분	순위	세부 내용
제도적 요인	74위	재정의 비정상적인 지급·지출 50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79위, 정부지출 낭비여부 80위, 정부규제 부담 84위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 101위, 정책결정의 투명성 137위 등
인프라	11위	도로 15위, 철도 8위, 항만 2위, 항공 4위 등
거시경제 안정성	9위	재정수지 18위, 인플레이션 1위, 정부부채 50위, 국가신용도 22위 등
보건 및 초등교육	18위	영아 사망률 26위, 기대수명 15위, 초등교육의 질 23위 등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19위	중등교육 취학률 47위, 고등교육 취학률 11위, 교육시스템의 질 64위, 기업의 직업훈련 51위 등
상품시장 효율성	33위	시장 지배의 정도 118위, 창업시 행정절차 30위 창업시 소요시간 25위, 무역장벽 정도 98위 등
노동시장 효율성	78위	노사간 협력 132위, 임금결정의 유연성 61위, 고용 및 해고관행 108위, 정리해고 비용 120위, 보수 및 생산성 21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97위 등
금융시장 성숙도	81위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성 92위, 은행건전성 113위, 증권거래관련 규제 94위 등
기술수용 적극성	22위	첨단기술 이용가능성 27위, FDI를 통한 기술이전 84위, 인터넷 이용자수 15위 등
시장규모	12위	국내 시장규모 12위, 해외 시장규모 5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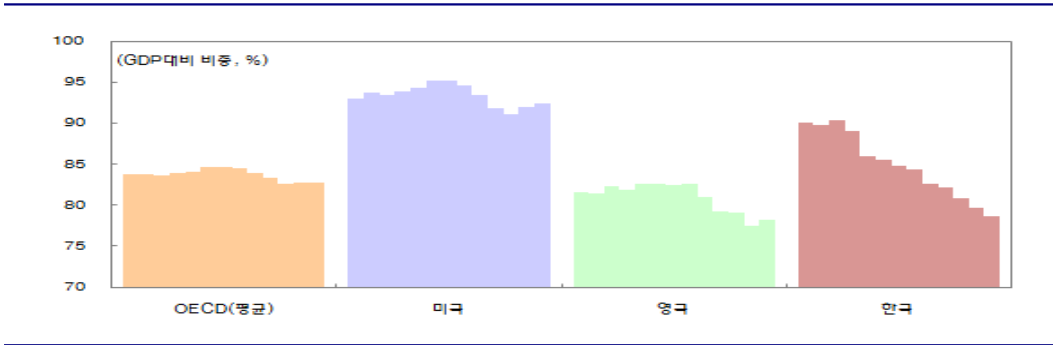
3) 부문간 불균형 지속

수출,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부문간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구조적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회복에 비하여 체감경기 개선이 더디고, 저소득층→고소득층,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GDP 대비 내수 비중 추이를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이 80% 초중반대를 유

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내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70% 대에 머물고 있다. 산업별로도 서비스업 비중이 60% 내외 수준에서 정체되어, 미국(78.3%, 2011년), 독일(70.1%, 2011년), 일본(70.5%, 2011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p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5> OECD 국가들의 내수 비중 추이



자료: OECD, 주: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GDP 비중으로 비교.

경제주체별로 살펴보아도 불균형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먼저 가계를 살펴보면, 소득분배가 최근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IMF 위기 등을 거치면서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2005→2006년중 13.4%에서 2011→2012년중 11.0%로 낮아져 계층간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 부문 역시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노동생산성,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의 1.26배에 달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R&D 투자 부족 등으로 임금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게 되어 중소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

<표 3> 대-중소기업 항목별 격차(대기업/중소기업, '12년 기준, 배)

매출액 영업이익률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장비율
1.26	2.88	1.61	3.32

3. 한국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

앞에서 제기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이를 구체화하

는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아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기존 성장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하며, 각 부문간 균형을 회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6>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자료: 기획재정부.

1) 기초가 튼튼한 경제

첫 번째 추진전략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기관 정상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공공부문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인 높은 부채비율, 방만 경영과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 도입, 구분회계제도의 확대 적용, 대외비·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의 공개,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⁶⁾ 등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보화 · 중소기업 · 해외투자 · 고용/복지 등 4대 분야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재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참여 확대 · 기업분할 · 자회사 신설 · 비핵심사업 처분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 정상화 뿐 아니라 재정개혁도 추진한다. 재정지출에 대한 전면적 구조 조정,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공무원 · 군인 ·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선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주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들이 서로 원칙을 지키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민 · 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 하도급 불공정 특약 금지 등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미 도입한 제도들의 시행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직무 · 능력 ·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립,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를 축소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보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표 4〉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세부 실행과제

핵심 과제	세부 실행과제와 주요 내용
공공부문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고용세습, 과도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정상화 ○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대외비, 경영비밀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 공개 ○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 자산매각 방식 다양화, 공사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 비리 · 불공정거래 근절: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수의계약 관리 강화 ○ 공공기관 생산성 ·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기능 점검 및 경쟁원리 도입 ○ 재정지출의 효율성 · 책임성 강화: 재정지출 전면적 구조조정(3년간 600개 이상 사업수 감축) ○ 보조금 개혁: 전 분야 전면적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 보조사업 필요성 · 성과 전면 재검토 ○ 직역연금 개혁: 재정재계산을 거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제도개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 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경제민주화 제도 안정적 착근, 하도급 · 유통 ·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 상가 권리금 보호: 권리금 법적 정의 · 표준계약서 도입, 임차인 권리 강화, 분쟁조정기구 설치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차별시 처벌 강화, 근로조건 보호 강화, 정규직 보호 합리화 ○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임금 · 근로시간 개혁,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 파견규제 합리화 ○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사회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 실업급여 개편, 취업경력 DB화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6) 입찰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입찰 업무를 2년간 전문기관(조달청 등)에 의무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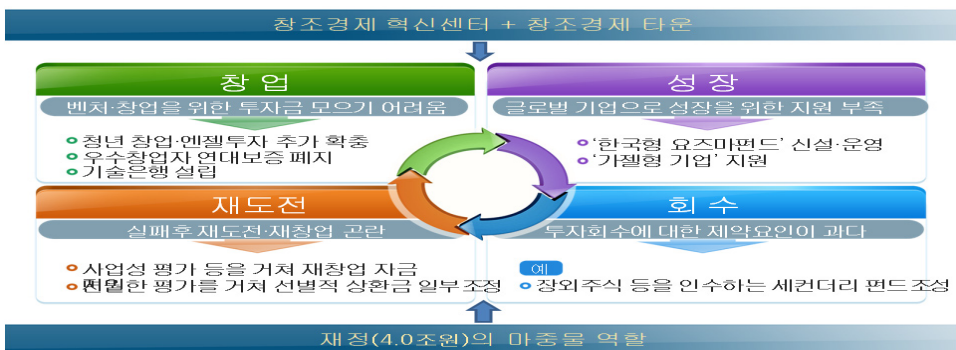
경제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을 위한 보호망도 강화한다. 고용보험 사각 지대 축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가운데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 ‘혁신과 경쟁’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초연금 도입, 장애인 연금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등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2) 역동적인 혁신 경제

두 번째 추진전략인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과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지평을 넓히기 위한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 진출 촉진’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창업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 → 회수 및 재도전’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하고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활성화하고 17개 시도별로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정책금융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엔젤투자 등 다양한 투자 경로를 활성화하여 창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주요시장 성장과 외국기업과의 M&A를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신설하는 등 경쟁력 있는 창업·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세컨더리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하고 경로를 다양화하여 신규투자·재투자 유인을 확대하고, 기업인들이 실패에 대한 과도한 부담 없이 도전적인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재도전 신속지원절차를 구축키로 하였다.

<그림 7> 창업→성장→회수 및 재도전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추진과제



자료: 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2017년까지 국가의 R&D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정부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민간 R&D 활성화 정책지원센터 설립·운영하여 민간의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키로 하였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환경·에너지 문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특히,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전략을 통해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을 수출 기업으로 육성하고, 온라인 수출, 방송·문화 등 콘텐츠 수출을 활성화하여 무역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표 5〉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세부 실행과제

핵심 과제	세부 실행과제와 주요 내용
창조경제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참여 활성화, 멘토링 내실화, 아이디어 성숙단계별 지원 강화 ○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지역 아이디어가 ‘창업 → 중소·중견기업 →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밀착 지원 ○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금융·R&D 등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경쟁 도입 ○ 창업→중소기업 경영으로 해소: 창의·도전적 과제 전용 R&D 프로그램 도입, 핵심인력 장기근속 유도 ○ 중소→중견기업 경영으로 해소: 중견기업에 대한 급격한 지원단절·규제증가 방지 ○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 순차적 폐지, 기술은행 설립, 재도전 신속지원절차 구축 ○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엔젤투자 지원 확대, 한국형 요즈마 펀드·여성벤처펀드 등 정책금융 지원 강화 ○ M&A 매수기반 확대: 규제완화를 통해 사모투자펀드, 전략적 투자자 등의 M&A 수요 확대 ○ M&A 인센티브 확대: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펀드 확대, 세금부담 경감 ○ M&A 규제 완화: M&A 가격규제 완화, 다양한 방식의 M&A 허용 등 ○ 융합신산업 육성: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성장동력 발굴
미래대비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총량 확대: 정부 R&D 투자 지속 확대, 민간 R&D활성화 정책지원센터 설립·운영 ○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Korea Research Fellowship 신설 ○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촉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특허박스), 특허 등 심사·심판처리절차 단축, 지재산 관련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착: 배출권거래제 차질없이 준비·시행 ○ 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셰일가스 개발참여,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신시장 창출: 전기차, 탄소포집저장장치 등 8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소각장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공급
해외진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글로벌 강소기업 → Pre world class → World class 300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육성 ○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공인인증 관련 규제 정비 등을 통해 한국 대표 오픈마켓 구축 ○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FTA 시장규모를 70% 이상으로 확대, 업종별 FTA 활용제고대책 수립 ○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대기업 동반진출 모델 구축 ○ 국내 외화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온렌딩 제도 도입 ○ EDCF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EDCF의 중소·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 등 ○ 문화·방송 등 콘텐츠 수출 촉진: 콘텐츠 수출금융 지원 확대, 맞춤형 마케팅 지원

3) 내수·수출 균형 경제

세 번째 추진전략인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만들기 위해 투자·소비 등 내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하여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도권과 지방의 고른 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가계부채·주거비·사교육비 등 소비를 가로막는 3대 부담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변동금리·일시상환 중심의 가계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여 채무 상황 부담을 낮추어 가기로 하였다. 투자→거주, 대규모 신축→재정비, 전세→월세 중심으로의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되었던 규제들을 정비하고, 재정비사업 활성화, 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현재 19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2017년까지 2조원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아래 선택과목 확대, 수준별 이동수업 등 공교육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기존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과 자동효력 상실제 적용 등을 통해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분야별 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면밀하게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민·관 합동 T/F를 구축하여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였다.

청년·여성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경기 개선과 함께 취업자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과 여성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청년층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족과 미스매치로 인해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고, 고용률도 2004년 45.1%에서 2013년 39.7%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성 고용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는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뿐 아니라, 인구 둔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진입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 평생교육 체계 구축, 계약학과 확산,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 선취업-후진학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맞춤형 보육·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3대 추진 전략에 추가하여 정부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 ‘통일시대 준비’를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통일에 대한 경제적 논의는 대부분 통일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일을 남북의 경제적 역량을 결합하고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가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하여 통일에 대한 준비를 폭넓게 진

행해 나갈 계획이다.

<표 6>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세부 실행과제

핵심 과제	세부 실행과제와 주요 내용
내수(소비)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구조개선: 가계부채비율 목표 관리, 대출구조 개선, 취약계층 부담 완화 ○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규제 개선, 공유형 모기지 지원 확대, 재정비사업 활성화 ○ 임대시장 안정: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월세 지원 강화 ○ 사교육비 부담 경감: 수준별 이동수업, 선택과목 확대 등 공교육 정상화, 대학입시 부담 완화
투자여건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네거티브 전환, 자동효력 상실제 ○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해소: 실제 세부담 수준의 격차 대폭 축소, 서비스 R&D·창업 등 지원 확대 ○ 유망서비스업 원스톱 지원: 분야별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 서비스업 육성: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진출입 및 영업규제 완화, U-health 활성화 ○ 교육서비스업 육성: 해외 우수 특성화대학 유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규제 완화 ○ 관광서비스업 육성: 입국·숙박·음식·문화·쇼핑 등 여행 전반의 편의성 제고, 관광인프라 확충 ○ 금융서비스업 육성: 금융규제 전면 재점검을 통해 규제 개선 ○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확산, 보안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콘텐츠산업 활성화: R&D, 창업, 인력 등 지원 강화,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 입지 등 지역산업 밀착형 규제 완화, 지역거점개발 촉진 ○ 지역간 연계 협력 강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산업협력권 사업 등 지역 수요기반의 협력사업 발굴과 지원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 활성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완료, 선취업-후진학 촉진, 중소기업 근로유인 강화 ○ 여성고용 활성화: 육아휴직제도 확충, 맞춤형 보육·돌봄 지원체계 구축, 재취업 지원 강화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 및 전일제 복귀 보장, 시간선택제 근로자 차별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확대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정부는 앞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7년에 3%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이 4%대로 상승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도 3만불을 넘어 4만불로 향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외신과 해외 투자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적 대책에서 벗어나 규제개혁·서비스업 육성·노동시장 개혁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하였다는 평가다. 2014.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G20의 '종합적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모범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제시한 추진 과제들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떨어져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

하고 혁신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동참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혁신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하여 민-관이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부 실행과제별로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들로 구성된 국민 점검반을 운영하여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철저하게 점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될 경우 단순히 경제 지표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도 크게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부문이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노동자와 기업가, 소비자와 기업이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고 엔젤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펙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청년들이 선취업-후진학, 일·학습 병행 등을 통해 자신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여성도 출산·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 살펴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향후 3~4년의 정책 대응이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을지를 좌우한다는 절박한 상황인식하에 마련되었다. 세계 경제의 전환기에서 우리 경제가 대도약을 이루려면 이번 기회에 그동안 알면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고질적인 과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모든 경제주체들이 비장한 각오로 함께 역량과 지혜를 모을 때이다.

<참고> G20 주요 회원국 성장전략의 주요내용

1. 미국

- (목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속화가 핵심 목표
 - 향후 5년간 평균 3.2% 성장, '18년까지 실업률은 5.4%로 하락 예상
- (정책방향) 중산층 강화, 소득불평등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중장기 재정여건 개선 등이 주요 정책과제
 - (단기 경기대응) 경기부양적 거시정책 지속, 최소임금(현재 시간당 7.25불) 상향조정, 공공 투자 확대(교통·통신 네트워크) 및 인프라 은행 설립
 - (구조적 대응) 노동참여 확대, 교육, 직업훈련, 무역, 에너지, 금융개혁,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정책역량 집중
 - (노동참여)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등 취약계층 직업기술 기반 강화, 직장 내 차별해소 등 노동참여 인센티브 강화
 - (교육) 대학진학률(현재 42%) 제고, 공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투자 확대
 - (직업훈련) 직장 내 훈련 확대, 도제 프로그램(apprenticeship) 확대, 산-학 파트너십 강화, 정부 직업훈련 프로그램 통폐합 및 효율성 제고
 - (무역) TPP·T-TIP(환대서양 무역·투자 파트너십) 등 메가 FTA 진전, 다자간 서비스·정보기술 협정 적극 참여 등
 -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생산 확대, 클린에너지 투자 등
 - (금융개혁) 도드-프랭크 법 하에서 금융안정감독위원회 설립
 - (재정) 연방채무를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되, 단기 유연성 확보

2. 일본

- (목표) '13~'22년간 명목성장률 3%, 실질성장률 2% 달성
- (정책방향) 분야별 구조개혁 노력 강화
 - (투자)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제고
 - 국가전략특구지정을 통해 의료·교육·농업·도시계획 분야의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 민간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제공
 - (고용)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여 여성 고용률(현재 68%) 제고에 초점
 - (무역) 경제 파트너십 활성화 및 무역원활화 조치 시행
 - TPP, RCEP, 한중일 FTA, 日-EU 경제동반자 협정(EPA) 추진
 - 무역관련 절차 간소화 등 무역원활화 조치 시행, WTO 무역원활화 합의사항 이행 등

- (경쟁) 민간 경제활동 부활을 위해 비처방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 등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 촉진

3. 독일

- (목표)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
- (정책방향)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투자와 혁신 여건 개선, 노동시장 정책 개선, 에너지 개혁이 주요과제
 - (재정) 국가채무비율을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
 - (투자) 시급한 공공교통 인프라 투자,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능 강화, 보다 효율적인 법률·조세제도를 통한 벤처자본시장 경쟁력 제고
 - (경쟁) 반독점 위반 관련 행정·법적 절차 개선, 카르텔 법 강화 등
 - (혁신) 기존 하이테크 전략을 종합적 혁신전략으로 발전. 기술·사회적 혁신 장려를 통해 R&D의 상용화 촉진
 - (고용) 청년고용 및 장기실업자 해소 노력 강화, 여성 노동참여 확대를 위한 양육서비스 질 제고, 육아휴직 제도 개선,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 (에너지) 에너지의 저비용 고효율 지향, 재생에너지 시장 및 시스템 개선
 - (개발) 개도국들의 저탄소 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강화

4. 프랑스

- (목표)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더불어 실업률 감소, '15년 이후에는 최소 2%의 성장 달성
- (정책방향) 산출갭 해소에 초점을 두고 정책 추진
 - (재정) 재정건전화 속도 조절
 - (고용) 연금개혁을 통한 고령자 노동참여 제고, 장기실업자 감축노력, 고용보호법 개혁, 직업훈련 시스템 개혁
 - (경쟁) 경쟁·고용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노동비용 절감, 법률·회계 등 서비스분야 규제완화, 교통·에너지 분야 개혁 등
 - (투자) 주택공급 확대, R&D 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자금 조달 원활화

5. 영국

- (목표) '16년부터 2% 후반대 성장 예상('16년 2.6%, '17·'18년 2.7%)
- (정책방향) 크게 완화적 통화정책과 신용확대, 재정적자 감축, 금융시스템 개혁, 투자·고용·경쟁 등 종합적 구조개혁 패키지에 초점
 - (통화정책) 당분간 수요증진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 대출펀딩제도*(FLS: Funding for Lending Scheme)를 지속 유지하되, 중소기업 대출에 더욱 초점
 - * 영란은행이 시중은행이 보유한 대출자산을 담보로 영국 국채를 대여해줌으로써 은행들에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고 가계·기업대출 유도
- (재정) 적자감축 노력 등 재정건전화 추진
- (투자) 인프라 및 중소기업 투자확대에 초점
 - 재무부 산하 “Infrastructure UK” 설립을 통해 장기 인프라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가 인프라 계획” 발간
 -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출 재조정
 - PPP, 정부보증계획 등 인프라 투자 민간참여 촉진
 - 대출펀딩제도 외에도 Business Finance Partnership, Business Bank 설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자금 조달 지원
- (고용) 근로계층 관련 복지혜택을 통합한 Universal Credit 시행 및 수급한도 설정 등 근로유인형 복지체계 구축
 - 청년 직업훈련 및 청년근로자 보험기여금 폐지, 여성 보육비용 지원, 장애인 구직 지원 프로그램 등
- (무역) standstill 공약 이행, WTO 합의 지지, 환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 참여 등
- (경쟁) 규제감량제(one-in two-out) 도입, red tape 온라인 신문고 운영, 건물 허가규제 등 도시계획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 등

6. EU

- (목표) ①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②대출능력 회복, ③성장과 경쟁력 제고, ④고실업과 사회불안정 대응, ⑤공공행정 현대화 등 5대분야에 초점
- (정책방향) 거시정책 조화와 투자·고용·경쟁·무역 분야 구조개혁
 - (거시정책) 재정수지 균형, 초저금리 상당기간 지속, 유로존 불균형 진단 및 국가별 정책권고 마련
 - (투자) 대출능력 회복 및 유로존 은행연합 진전, 중소기업 및 인프라 파이낸싱 강화, Connecting Europe Facility* 설립 등
 - * '14-'20년간 330억불의 예산으로 유럽의 교통, 에너지, 디지털 네트워크 투자 지원
 - (고용) Youth Guarantee를 통해 고용·교육·훈련 지원, 리쿠르팅 네트워크 단일화 등을 통한 노동이동성 촉진
 - (경쟁) 서비스(금융), 에너지, 교통, 디지털 시장 단일화 촉진
 - (무역) WTO 합의 이행 및 DDA 협상진전 기여, FTA 확대

7. 중국

- (목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20년까지 1인당 GDP를 '10년 대비 2배로 증대
 - '14년의 경우 7.5% 성장, 3.5% 물가상승, 도시지역 1,0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 실업률 4.6% 미만 달성이 주 목표
- (정책방향) 자원배분 등에 있어 시장기능 강화, 정부 기능 효율화, 재정·조세시스템 개혁, 도농간 동반성장, 개방 심화 등에 초점
 - (투자) 과잉설비 분야의 경우 환경·에너지 관련 기준 강화 및 신규 설비증설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관련 투자 확대, 도시화의 질 제고*, 외국의 대중국 투자 절차 개선
 - * 대중교통·에너지 및 물 공급·배수시설 등 확충, 학교·병원·문화센터 등 확대
 - (고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 장려, 대학졸업자들의 취직지원 논스톱 서비스 제공, 도시가구 내 최소 한 명은 직업을 갖도록 도시민 구직지원 강화, 과잉설비 청산 등에 따른 실직자 재취업 지원
 - (무역) 올해 수출입 총 증가율 7.5% 예상, 통관개혁 및 국경간 e-commerce 시범사업 확대, 수입촉진책 시행, 다자간 서비스협정 참여 노력 및 정부조달협정 참여
 - (경쟁) 인허가 절차 개선, 재정·조세개혁, 금융시스템 개혁, 혼합소유제 경제 촉진, 창조경제
 - * (재정) 예산시스템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중앙-지방정부 지출권한 재조정 및 지방정부 자금조달 표준 메커니즘 확립
 - (조세) 영업세→부가세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중소기업 조세감면
 - (금융) 금리자유화 지속, 위안화 양방향 유연성 제고, 중소형 은행 확대,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
 - (창조경제) IT산업과 여타산업 간 융합 촉진, 혁신·창업활성화 플랫폼 구축